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27
----------	-------

제출년월일 : 2024. 9. 4.

발 의 자 : 박은경,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현옥순, 한갑수,
유재수, 최진호, 송바우나,
이지화, 김진숙, 선현우,
최찬규, 김유숙, 황은화,
이진분, 박은정(17인)

1. 주 문

- “불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만든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는 강제노역, 구타, 가혹 행위, 암매장 등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1982년 폐쇄 전까지는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정책에 따라 지속 운영되었음.
- 하지만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명확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고,

- 경기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 관외 거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음.
- 이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보상,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불량행동을 한 소년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하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이후 40년동안 약 4,700여명의 미성년자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 행위, 암매장 등 인권 유린 행위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소년들이 목숨을 잃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현재는 안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은 대부도 선감동에는 아직도 선감학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있고, 국가 권력이 자행한 폭력과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은 추악한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안산시의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역사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치유해야만 한다.

선감학원에서 자행된 이같은 인권침해행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국가폭력으로, 선감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했던 경기도,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던 정부 또한 사건의 직접적 가해자로서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지원 등의 공적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의 계획과 함께 피해생존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 범위를 경기도민으로 한정해 경기도 관외 거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현실이다.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대해 은폐된 진상을 규명하여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그에 따른 보상을 위한 선감학원 특별법은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과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 하라는 첫 판결이 선고된 만큼 정부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자행한 인권유린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성하고 선감학원 피해자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의 인권이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선감학원에서 장기간 행해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 하라!

하나. 정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각적 지원정책을 적극 강구하라!

2024. 9. 12.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